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10.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 장 담 당 자	이 진 철 최 은 지		044-201-4016 044-201-40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강력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야외 공간도 밀집된 환경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서 유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물류업체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소독, 환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로 한강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야외감염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9월 9일(수) 주요 배달 이동통신 앱 회사에 대해 한강 공원 내에서 음식물 배달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이송능력 확대를 위해 출동이 가장 빈번한 7개 소방서에 구급대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향후 구급차의 추가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난 8월 19일(수)부터 관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총 1,604개소를 점검하였다. 이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 한편, 매출 감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기 위해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 * (지원한도) 최대 1억 원 → 최대 3억 원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제조업체 → 50인 미만 제조업체
- 경기도는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유인책(인센티브)와 소비지원금을 활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9월 18일(금)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2만 원(기본 인센티브 10%)을 즉시 지급하고, 이를 11월 17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 현황 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택배·유통시설 방역 점검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국민 생활과 연관성이 높고, 접촉·밀집도가 높은 택배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62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1단계) 시설관리주체 자체점검 → (2단계) 지자체 점검 → (3단계) 국토부 합동점검

○ 그간 지속적으로 상시점검을 이어온 결과,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즉시 폐쇄, 접촉자 신속 통지 등으로 추가 전파 가능성 차단하는 등 업계의 방역 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평균 지적 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시설별 평균 지적 건수(지적건수/시설수): 6.75건(5월점검) → 0.84건(6월점검) → 0.21건(7월 이후 점검)

○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언택트 소비) 증가로 올 추석에는 택배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 작업 인원과 시간도 증가하여 밀접접촉,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택배·유통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주간(9.7~25)을 지정하여 중점 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작업 밀집도가 높은 468개 택배·유통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인천사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① 8월 16일(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5일~9월 6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0.5%(687만 건) 감소하였다.

- 단, 직전 주말(8월 29일~8월 30일)과 비교하면 6.3%(157만 건) 증가하였다.

* (8.15.~16.) 33,484천 건 → (8.29.~30.) 25,043천 건 → (9.5.~6.) 26,613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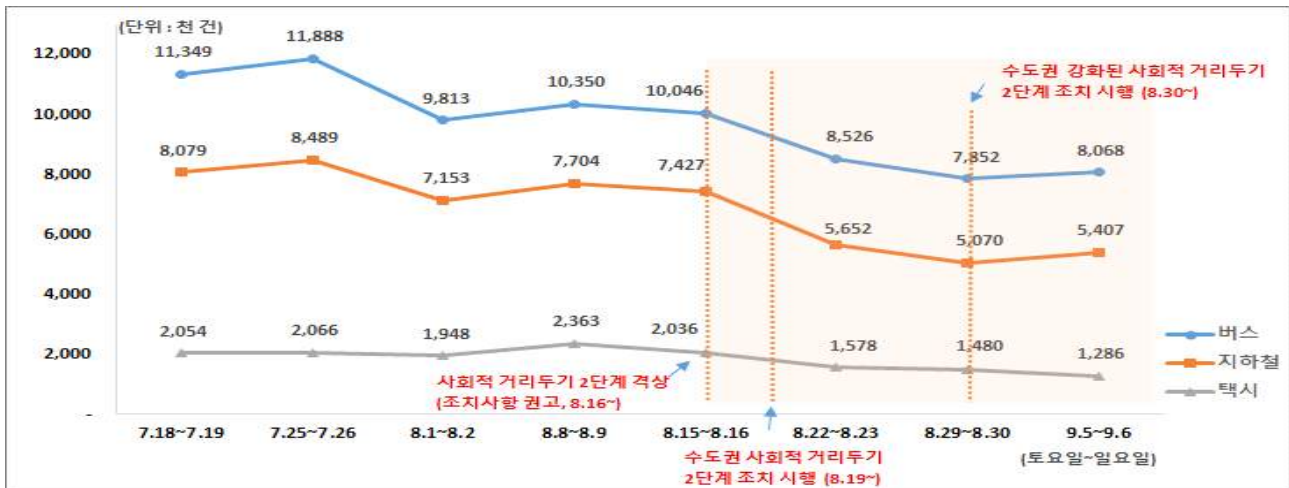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4.3%(475만 건) 감소하였다.

- 단, 직전 주말(8월 29일~8월 30일)과 비교하면 2.5%(36만 건) 증가하였다.

* (8.15.~16.) 19,509천 건 → (8.29.~30.) 14,402천 건 → (9.5.~6.) 14,761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③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0.3%(1,203억 원) 감소하였다.

- 단, 직전 주말(8월 29일~8월 30일)과 비교하면 3.5%(356억 원) 증가하였다.

* (8.15.~16.) 11,648억 원 → (8.29.~30.) 10,089억 원 → (9.5.~6.) 10,445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이동량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다만, 직전 주말(8.29.~30.)에 비해 이동량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거리 두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9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300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6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3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9월 9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만4755개소, ▲교회 2,657개소 등 36개 분야 총 4만1973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3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만491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369반, 2,945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자정까지 적용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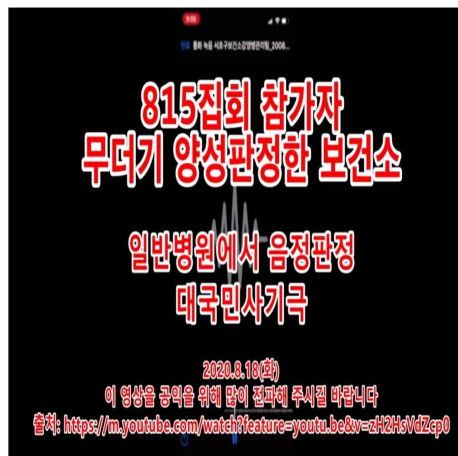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오전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를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